

이재명 '선 국정 정상화 후 내각구성' 방안 관심 집중

새정부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 발표...내수 침체 적극 대응 실무진 교체·시스템 구축에 집중...내각 더욱 탄탄하게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새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발표하면서 대선 이후 정국 구상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선(先) 국정 정상화, 후(後) 내각 구성'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부 근간이 흔들린 만큼, 차기 정부 초기에 장관 등 내각 구성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실무 위주의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자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면서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준비된 후보와 정당만이 삼각파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 일정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배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 캠프 안팎에서 차기 정부 내각에 대한 무수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후보는 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안팎에서 과거 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인사정문화 등을 거쳐야 하는 내각 구성을 뒤로 미루고 '일 중심'의 실무진 교체를 먼저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이 후보가 경제에 초점을 맞춘 비상 기구 구성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야당과 장관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일부 부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면서 "일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특성상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정 정상화를 시급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실무진 교체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면서 내각을 더욱 탄탄하게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도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 낼 약속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면서 대선 이후 갈등을 끊어내고 국정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켜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았다"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고,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게 민주주의 복원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책임자 아닌가"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소나무당 등 현정수호 내란청산 4당 선거연대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대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열렸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가운데)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발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능력 중심의 인사 구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도 '능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할 것이며,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가 굳건해질 것"이라며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문수 "사당화 정치 마침표"... '尹 수직적 당정관계' 절연 시동

당정협력·당-대통령 분리 등 추진

김문수 후보가 25일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줄곧 제기됐던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를 반성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당정협

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당시의 당정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

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이날 입장 발표는 당정 관계를 반성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내겠다는 생각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철뉴스

5·18 행불자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 찾는다

광주시, 연말까지 상시 신청 가능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가족 중 희망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8차 보상 신청자 가족 가운데 유전자 분석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유전자 분석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

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사업'으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시청 또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해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면 발급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등의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19기의 무연고 유해를 포함

해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DNA 정보(총 602건)를 비교하는 작업 등이 이뤄진다.

유전자 분석은 STR(염기서열 반복) 방식과 함께 정밀도가 높은 SNP(단일염기다형성) 기법을 병행해 적용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기관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3명의 신원을 확인해 현재까지 총 9명의 행방불명자 신원이 밝혀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선 핫이슈로 떠오른 '전남 신재생에너지'

이 "신속하게 송·전망 건설해야" 김 "재생에너지 효율적 사용해야"

21대 대선선거에서 전남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선후보들의 1·2차 TV토론회에서 전남 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듭 부각해 대선 이후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남 지역의 풍부한 해상풍력·태양광 등을 기본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미래에너지 사업의 토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지난 23일 사회분야 2차 TV토론회에서도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대선후보들의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해안 중심으로 풍력발전, 농촌 중심 태양광 발전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남일대의 재생에너지가 송·전망이 부족해 추가 발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 데이터 센

터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즉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육성으로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의 풍부한 바다와 농지를 이용해 주민 참여 공익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해남),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목포),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영광), '공공주도 해상풍력 직접화 단지' (진도)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에 전남 7대 핵심공약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생산단가,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 확대와 원자력을 기저전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